

제259호 (2010. 5. 17)

■ 건설 경기

- 재고주택 및 신규주택 구매의사 2분기 연속 감소

■ 정책·경영

- “공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저가심의방식 도입 필요”
- “건설공사보험 의무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해야”

■ 정보 마당

- 유로지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업계 ‘녹색’ 바람

재고주택 및 신규주택 구매의사 2분기 연속 감소

- 주택경기 침체로 수도권 주택구매심리 위축, 중소형주택 선호 뚜렷 -

■ 재고주택 매수계획, 전기 대비 0.7%p 줄어 2분기 연속 감소세

- 2010년 2/4분기 주택거래소비자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3%가 향후 6개월 이내 재고주택 매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매수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분기 연속 감소함.
 - 매수계획이 '있다'는 22.3%로 전기 대비 0.7%p 감소, '없다'는 53.7%로 2.2%p 증가, '확실하지 않다'는 24.1%로 1.1%p 감소함.
 - 매수희망자는 서울, 20~30대, 99~132㎡(분양면적 기준, 30평형대), 165㎡ 이상 거주자, 월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과 400만~700만원 미만 가구에서 높게 조사됨.
- 매수희망지역 및 규모는 서울, 99~132㎡(30평형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매수희망지역은 서울 51.6%, 경기 39.2%, 인천 6.5%, 기타 2.7%로 조사됨.
 - 매수희망규모는 99~132㎡(30평형대)가 4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서울 및 경기 거주자는 99~132㎡(30평형대), 인천은 132~165㎡(40평형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월가구 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99~132㎡(30평형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매수희망자 중 실거주 목적자는 '교통권 개선'과 '규모 확대'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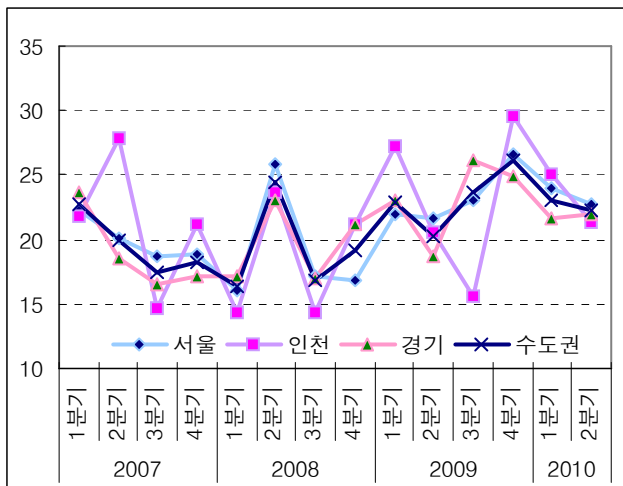
■ 신규주택 청약계획도 전기 대비 5.5%p 줄어 2분기 연속 감소

- 향후 6개월 이내 청약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9.0%가 청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재고주택 매수의사와 마찬가지로 2분기 연속 감소함.
 - 청약의사가 '있다'는 19.0%로 전기 대비 5.5%p 감소했으며, '없다'는 50.8%로 5.2%p 증가, '확실하지 않다'는 30.2%로 0.3%p 증가함.
 - 청약희망자 중 99㎡(21.2%) 이하, 165㎡ 이상(21.3%) 거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월가구 소득별로는 400만~700만원 미만(20.0%) 가구에서 높게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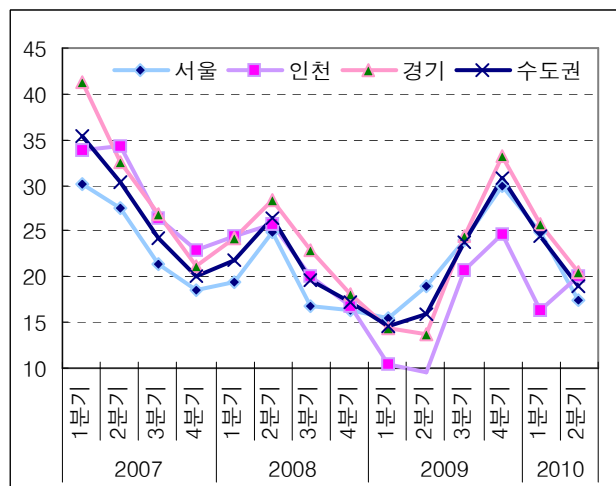
* 분기별로 부동산114(주)에서 인구비례할당방식으로 수도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주간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함(2010년 2/4분기 유효표본수 835명).

- 청약희망지역 및 규모는 서울 및 경기, 99~132㎡(분양면적)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서울은 강남구(보금자리), 송파구(위례신도시), 경기도는 수원시(광교신도시), 인천은 연수구(송도지구), 남동구(서창2지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약희망규모는 지역별, 월가구 소득별, 연령대별 모두 132㎡ 미만의 주택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 청약이유로는 ‘최초 내집 마련’과 ‘유망지역분양’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재고주택 매수이사〉



〈신규주택 청약이사〉



자료 : 부동산114(주)

■ 실수요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분양전략 수립 개요

- 주택경기 침체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소형 규모의 주택을 선호하는 특징이 이번 조사 결과 두드러짐.
 - 신규주택 및 재고주택 구매 의사 비중이 2분기 연속으로 감소되었으며, 132㎡미만(40평형 미만)을 선호하며, 구매이유로 ‘교통권 개선’, ‘최초 내집마련’, ‘규모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건설회사의 분양시 최근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의 니즈(needs) 변화를 인식하고 니즈에 맞는 분양전략 수립이 필요함.

엄근용(연구원·kyeom@cerik.re.kr)

“공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저가심의방식 도입 필요”

– 2단계 저가심의체제를 유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저가심의를 담당해야 –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 실효성 미흡

-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에 적용하고 있는 저가심의제도는 덤핑 입찰의 배제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저가 심의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허위 증빙서류 등을 걸러내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절감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저가사유서 내용이 방대하여(5~6개 공종에 대한 사유서 200~2,000쪽 분량) 입찰자가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심사 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저가 사유서의 증빙자료 인정 실태를 보면, 시공실적을 증빙하는 작업일보에서 작업효율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입찰자가 저가심의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부 자재를 전략적으로 저가 구매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현행 최저가낙찰제는 저가 심사의 획일화, 과도한 행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저가심의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
 - 공사 유형에 따라 저가심을 1) 단순히 덤핑 투찰의 방지 기능과 2) 원가 절감 등 기술적 심의가 가능한 방식(내역 수정을 허용)으로 구분 필요

〈공사 유형에 따른 저가심의방식 다양화 방안〉

공사 유형	저가심의방식	비고
1) 단순한 기술이 적용되거나 저가 투찰로 인하여 시공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	‘제한적 최저가’로 발주하거나 현행 저가 심의방식을 개선해 1차 객관적 저가심의만을 실시	단, 공법 제한 등을 통하여 해당 공사 적격자로 한정하여 입찰 참가자수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
2) 고난도 공사나 교량이나 터널 지하철 등 기술경쟁이 필요한 공사	2단계 입찰(two step bidding)을 통하여 1차 심의를 통과한 기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 실시	예 : 고난도 PQ 대상 공사
3) 공사 규모가 큰 대형공사로서 원가 절감이 요구되는 공사	최저가 Ⅲ방식을 활용하거나 현행과 같이 1, 2단계 저가심을 실시하되, 저가심의 기준을 단순화하고, 저가 사유를 강화하여 시행	

■ 기술제안이 가미된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도입 검토

-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하여 최저제한가격(Lower Limit)을 활용한 ‘제한적최저가’ 제도를 검토하고, 투찰률이 최저제한선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해야 함.
 - 낙찰률 최저제한선은 현행의 공종기준금액 산정 방식을 원용하여 1)발주자 설계금액과 2)입찰자 평균 투찰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고, 발주기관마다 공사 종류별로 달리 규정
 - 발주자설계금액을 비공개하여 입찰자가 공종기준금액을 손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함.
 - 최저제한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가운데, 새로운 공법이나 기술을 동원해 원가를 낮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수정 여부와 기술제안의 타당성 등을 확인해 최종 낙찰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
 - 조달청 1군 범위를 3~4개 군으로 세분하여 입찰참가자수를 줄이고, 체급별 경쟁 강화

■ 2단계의 저가심의제도 유지 필요, 발주자가 저가심의에 적극 참여해야

- 정부에서는 2단계 저가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순수 최저가 응찰자부터 저가심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절감사유서 작성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보다 낙찰률이 하락하여 낙찰률이 60%대 중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저가 심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저가심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과도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저가심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를 통하여 2단계 심사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
 -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저가심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저가심의업무의 질적 제고 및 과도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측에서 저가심의업무에 적극 참여토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 1단계 객관적 심의는 ‘부적정공종수’로 평가하기 보다는 ‘직접공사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주요 자재비 및 주요 공종의 노무비에 대해서 저가심을 강화해야 함.
- 2단계 주관적 심사에서는 저가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저가심의의 간소화와 더불어 저가 사유서의 인정 항목을 신기술신공법이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것으로 제한 필요
 - 2단계 주관적 심사 대상자가 최소화되도록 입찰 참여자수를 줄이거나 1차 객관적 심사를 강화하고, 심의결과의 공개 및 해명(Debriefing) 제도 도입 필요

최민수(연구위원·mschoi@cerik.re.kr)

“건설공사보험 의무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해야”

— 건설공사 보험제도 개선 방안 모색 —

■ 과도한 보험료 등 문제점 노출

-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와 PQ 대상공사(경간 50m 이상인 교량, 터널, 철도 등 18개 공종)에 대해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고 예정가격 산정시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 현행 건설공사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해주고 있으나, 중소 규모의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둘째, 보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고, 보험회사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
- 건설공사보험료는 모든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회사인 Korean Re로부터 보험료를 구득해서 적용하므로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동일함.
 - 최근 5년 간(2004~08)의 ‘건설공사보험’ 손해율(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은 가장 낮은 2005년에 27.9%, 가장 높은 2006년에 60.9%로, 평균은 41.8%임. ‘조립보험’의 경우에는 2004년에는 6.2%이고, 가장 높은 2008년에는 41.2%로서, 5년간 평균 손해율은 23.0%임.
- 이와 같은 손해율 수치는 통상적으로 70~80%를 기록하는 다른 손해보험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임.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08년 70.8%이고, 2006년 78.9%임.
-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중소 규모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현장의 일반적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해야 함.
 - 만약 예산의 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예정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대상 공사와 담보 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 우선 위험도가 높은 공사에 한하여 공사 목적물에 대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화하고, 그 다음으로 제3자 배상 책임의 인적 상해와 물적 손해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

여야 함. 그리고 모든 공사로 대상 공사를 확대하고 같은 방법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 하여야 함.

■ 보험료 인하

-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70~80%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요율로 인식됨. 손해율을 70% 정도로 유지하려면 보험요율을 ‘건설공사보험’은 40.2%, ‘조립보험’은 67.1% 인하해야 함.
 - 최근 5년간 실적 손해율이 건설공사보험은 41.8%, 조립보험은 23.0%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이 인하되지 않는 것은 보험회사에 관계없이 모두 Korean Re로부터 보험요율을 구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 감독 당국의 요율 인하에 대한 감독과 함께 Korean Re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재보험 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됨.

■ 할인·할증 제도 도입

- 또한 과거 건설회사의 사고 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경험요율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사고실적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면 건설회사는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위험 방지 노력을 제고하는 유인이 될 수 있음.
-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의무화하면 공공공사 발주 금액의 50~55% 정도가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로 추정됨.
 - 건설공사보험을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할 경우 총 공공공사 규모를 40조원으로 가정하고 이 중 20조원(공공공사의 50%)이 추가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는 공사금액이고 현재 평균 보험요율이 0.35%라고 가정하면 약 7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함.
- 보험요율을 50% 정도 인하하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350억원 정도면 충분함. 또한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공사 규모 20조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50% 정도 인하하면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공공공사에 건설공사보험을 가입하게 할 수 있음.

이의섭(연구위원·eslee@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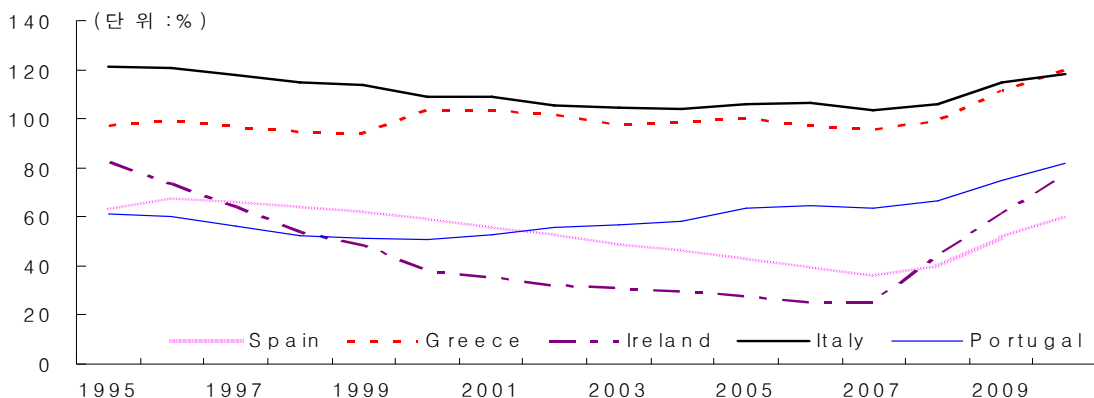
유로지역 경제위기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 확대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급증, ECB의 회원국 채권 매입시 유로화 안정에 기여 -

■ PIIGS, 확대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급증

- PIIGS로 불리는 일부 유럽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는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큰 폭 증대됨.
 - 유럽에서 경쟁력이 취약했던 이들 국가들이 유로화를 채택함에 따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이는 실질 금리의 하락을 의미함.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과잉부채와 과잉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실현
 - 물가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자, 2006년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지역의 정책금리를 2%에서 4% 수준으로 인상했는데, 이로 인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됨.
 -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위기가 현실화됨.

〈남부유럽 국가의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 추이〉



자료 : OECD

- 최근 그리스의 국가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국가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가 유로화를 폐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러한 주장은 유로화 전체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전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림.
 - 국가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그리스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로화를 폐기하고 자국 통화단위를 복원해야 함.

- 그리스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시도는 비슷한 수준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 이는 결국 유로화의 퇴출과 유로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부 지출 축소와 제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자구책 강구해야

- 유로화 사용으로 통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배제된,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① 정부의 지출을 대규모로 그리고 급격하게 축소하고 ②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하락시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
- 엄청난 사회 비용을 수반하는 그리스 정부의 자구 노력과 함께, 유로지역 수준에서 유럽중앙은행의 그리스정부 부채에 대한 지급보증, 유로지역에서 재정상황이 여유가 있는 독일 같은 국가들이 그리스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지난 5월 9일과 10일 EU의 재무장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으로 제기된 유로화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했음.
- 7,500억 유로 규모의 금융안정기금 설립(IMF의 2,500억 유로 출자 포함)
-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에 개입하여 유로화 사용국가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현재 EU규정은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채권을 발행시장에서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유럽중앙은행의 회원국 채권 매입시 유로화 안정에 기여

- 유로지역에는 물가안정 및 정책금리 결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이 존재하고 있으나, 통일된 재정정책 혹은 재정정책을 조화시킬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유럽연합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GDP 대비 각각 3%와 60%로 제한하는 재정안정 화협정을 준수할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국이 협정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단일통화에 상응하는 단일 재정정책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경제 위기를 계기로 설치된 금융안정화기금 혹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 ECB)의 회원국 채권 매입허용은 유로화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빈재익(연구위원-jipins@cerik.re.kr)

■ 주요 정부 부처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5.10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심사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규제 사무 관련 심의에 참여
5.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선진화 TF 소위원회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연구위원 참여 - 산업안전 선진화 TF의 선진화방안 보고 내용 검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개발 핵심쟁점에 대한 대토론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인허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
5.12	한국금융연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심포지엄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 - ‘한국의 가계대출, 과연 안전한가’ 주제의 토론자로서 참석
5.13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 -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발전방안 토론회의 ‘상생협력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

■ 신규 연구과제 발령

과제명	주요 내용
공사용 자재분리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한다는 명분하에 공공 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120개의 공사용자재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 ■ 또한, 턴키공사에서도 자재분리발주가 강제화되어 있고, 최근에는 BTL공사 까지 중소기업형 자재의 분리발주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음. ■ 건설업체의 자재 구매권을 박탈하여 공사용 자재의 적기 공급이나 하자책임 등에 큰 문제점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 코자 함.
해외 원전건설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향후 해외 원자력발전 건설시장의 25%를 한국 업체들이 수주하는 거시 목표를 제시하였음. ■ 최근 5차례 이상 유찰 끝에 낙찰자가 결정된 신울진 1·2호기 입낙찰 방식 및 생산 구조는 원전사업의 특수성과 발주자의 책임성이 배제된 입낙찰제의 획일적 적용, 제한된 생산기반, 낙찰자 선정지연에 따른 건설공기 단축 부담 등의 문제점이 부각됨. ■ 해외 원전시장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국내 원전사업의 발주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건설업계 ‘녹색’ 바람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이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선진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사용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실천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와 활동은 선진국이 놀랄 정도로 공격적이다.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녹색’은 핵심이슈다. 건설과정에 투입되는 각종 기계장비와 건자재는 물론, 도로와 빌딩 등 건설생산물도 대표적 온실가스 발생원이다. 건설산업은 전체 땅과 물의 20% 이상을 쓰고 천연자원의 30% 이상을 활용하며 에너지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야말로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현장에서 저탄소 생산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공정관리 방식을 혁신해야 하며,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도로와 항만, 주택 등의 상품에 환경 가치를 추가하여 녹색건설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시설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도로 대신 철도 등 대체상품이 부각될 수 있다. 새로운 건설상품인 원자력,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공급 또한 건설산업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녹색화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 진화도 이루어야 한다. 녹색 건설기술의 핵심은 각종 첨단 기술과 건설의 적절한 융합과 통합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최신기술의 과감한 도입과 융합은 건설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며,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줄 것이다.

녹색건설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장 빠른 시장이다. 2013년에는 전 세계 주요 권역에서 신규로 발주되는 건축물의 30~60%가 녹색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내 건설기업의 발 빠른 행보는 물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또 예산과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녹색건설을 유도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녹색 프로젝트의 발주를 늘려야 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틀과 투자 유인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 관리비용의 저감을 통한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건강과 행복, 성취도 등이 향상되는 효과가 확인되면 자발적인 민간투자의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그린 건축물, 녹색 생활공간 등은 위기를 맞은 건설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해줄 것이다. 녹색성장에 있어서 건설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국가 경제 성장을 선도함은 물론 건설산업의 르네상스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만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아시아경제, 2010. 4. 9>

김흥수(원장:infra@cerik.re.kr)